

보 도 설 명 자 료

('22. 6. 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래전 기사 내용의 반복임
(6.9일자 한국경제 “나는 대한민국에 사기 당했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 (사례1) 유턴기업 1호로 알려진 기업은 약속받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폐업
- ☐ (사례2) 세종시에 투자하였으나 약속받았던 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은 말뿐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 해당기사는 과거 2015년 12월 8일, 2020년 6월 5일 한경에서 보도했던 내용이며, 당시 산업부·세종시에서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 해당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힘

<참고 1> 2015년 12월 8일 기사 및 보도해명자료

<참고 2> 2020년 6월 5일 기사 및 보도해명자료

※ 문의 : 해외투자과 안성호 과장(044-203-4090) / 박주형 사무관(4069)

한국경제

2015년 12월 08일 화요일 A18면 산업

“해외서 돌아오랴 할 땐 언제고 ...” U턴기업의 눈물

“서류 준비만 6개월 ... 정부 지원 늦어져 회사 부도”

“해외에 나간 기업이 4분의 1만 돌아와도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U턴기업을 통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겠다.”

2013년 초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이렇게 발표했다. 이후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들과 잇따라 U턴 업무협약(MOU)을 맺고, 큰일을 해낸 것처럼 대규도 행사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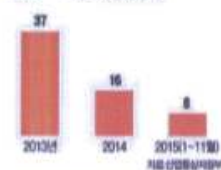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중국 배트남 등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크게 줄고 있다. 국내 복귀를 위해 올해 지자체와 MOU를 맺은 기업은 지난달까지 8개에 그쳤다. U턴기업인 세 명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30개가 넘는 서류 뭉치라니 - “한국에서 1년 이상 허송세월만 한 땀도 회사가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종일 씨는 10년간 중국 연타이에서 중장비 제조사인 대항을 운영했다. 매출은 20억원 정도였다. 2013년 5월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 전북 군산에 자리잡기로 했다. 실무직업에 들어가자 일은 예

해마다 줄고 있는 U턴기업

단위:개 ※국내 복귀 협약 기업 기준



정부 말만 믿었는데
간단한 심사에 사업 차질
9억 받으려 3억 예치하기도

국내 복귀 조건 매력 없어
올해 U턴기업 8개 그쳐

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산업부와 KOTRA, 전라북도 등이 요구하는 30개가 넘는 서류를 챙기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렸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는 절차도 까다로웠다.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내규를 이유로 그를 신규 사업자로 분류했다. 국내 사업



7월 전북 군산의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파워이엔지 생산공장은 일감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회사는 복귀한 U턴기업 지원차로 인해 2년 세 매출이 80억원에서 10억원대로 급감했다.

장이 없고, 은행거래 실적도 없어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였다. 총 1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공장 착공이 지연되면서 속이 타들어 갔다. 이리저리 뒤졌지만 허사였다. 고민 끝에 부지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비관 끝에 내뿜은 상태였다.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 현지공장의 품질과 납기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매출은 급감했다. 결국 최근 회사 문을 닫았다. 여씨는 “갑갑 공무원들은 차을연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도 어쩔 수 없다’며 뒷짐만 졌다”고 말했다.

※매출 80억에서 10억으로 급감
중장비 부품업체 파워이엔지도 부

도가 눈앞에 다가왔다. 장영문 파워이엔지 대표는 2012년 말 중국에서 U턴하기로 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데만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더 걸렸다. 생산 계획이 틀어지면서 하나둘 거래처가 멀어져 나갔다. 매출은 2012년 80억원대에서 작년 10억원 정도로 떨어졌다.

장 대표는 “지원법에 따라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다”며 하소연했다. 정책자금 9억원을 지원받는데 보증보험에 30%인 3억원을 예치하고, 7000만원을 보증료로 내야했다. 공장 완공 후 예치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장 대표는 “내가 권유해 U턴을 결정한 주위 기업인들이 어려울

을 호소할 땐면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직원 구하기도 어렵다”
중국 청다오에서 세종시로 온 공기업축기 회사 거성은 지난 10월 공장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지난달에야 첫 삼을 뒀다. 민덕현 거성 대표는 “이 기서 뽑은 직원을 중국 공장에 데리고 가 1년 이상 교육해야 해 부담이 배로 커졌다”고 했다.

직원을 뽑는 것도 쉽지 않다. 민 대표는 “고급 인력의 지방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지방 이전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정착할 걸 그랬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금 ‘매워(먹고 도망가기)’를 막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ook.com

보 도 해 명 자 료

('15.12.08)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해외서 돌아오랄땐 언제고 유턴기업의 눈물, 정부지원 늦어져 회사 부도('15.12.8.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일부 복귀기업이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유턴을 포기하거나, 경영 애로에 직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이하 “보조금 고시”)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동 고시(제21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즉시 지급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보조금 고시 관련 규정

제21조(보조금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동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 기사에서 사례 기업들의 경우, 기업 자체의 가용 자산 부족으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사례이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지 못할 상태여서 별도의 예치금이 필요했던 사례임
- 또한, 보조금과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상당액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재무적 취약기업의 경우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일부 기업의 경우, 산업부 및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담보력이 미흡한 개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은 안타깝게도 어려웠던 사례임.
- 향후 산업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생력을 갖춘 유망 기업의 유턴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13.12월 유턴법 시행으로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유턴기업 선정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향후에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중복서류 등은 지속 정비하여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기업 스스로 국내외 경영환경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턴 전후 경영수익 비교, 국내복귀이후 경쟁력 진단 등 사전 투자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임.

※ 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장 박진서(044-203-4090) 사무관 김민혜(4093)
 지역협력팀장 양광석(044-203-4418) 사무관 윤태선(4452)
 군 산 시 청 : 투자유치계장 황관선(063-454-2731)
 세종특별자치시청: 기업유치담당 김남경(044-300-4122)

한국경제

프린트

닫기

中서 유턴한 어느 中企 사장의 탄식..."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

입력 2020-06-05 17:27 수정 2020-10-12 16:05



민덕현 거성컴프레샤 사장이 세종시 공장에서 회한에 젖은 표정으로 재고로 쌓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공장은 한 대기업이 물류창고로 임차해 쓰고 있다. /민경진 기자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

5일 세종시 소정면 세종첨단산업단지에서 만난 민덕현 거성컴프레샤 사장(사진)은 "유턴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 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정부기관과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 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 이로부터 5년 뒤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민 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민 사장은 가동하지 않는 공장 한 동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뒤 5년간 임대를 금지하는 조건 탓이었다. 그는 "2018년 중순부터 직원 수를 40명에서 23명으로 줄일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았다"며 "생산을 멈춘 공장은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사장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기업회생 절차라는 제도도 이미 사업이 망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던 한 유턴업체 사장을 통해 알았다"고 푸념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무렵 민 사장이 고용한 인원은 9명까지 줄었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상시고 용인원 40명을 맞추지 못한 그는 정부와 세종시에서 받은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15억6000만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중 12억9000만원은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됐다.

그는 유턴기업이 해외에서 쌓은 실적을 국내 금융회사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지적했다. 민 사장은 "은행 원금상환 시기가 6개월만 유예됐더라도 생산 정상화를 거쳐 충분히 재기가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수십 년간 해외 사업을 벌이느라 한국에서 신용 또는 담보 용도의 부동산이 거의 없는 유턴기업은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업가는 평생 사업을 일굴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오는데 담당 공무원은 1~2년마다 교체되며 안면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하소연했다.

세종=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반론보도]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어느 中企 사장의 탄식'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6월 6일자 A1면에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中에서 유턴한 어느 中企 사장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가 거성컴프레사 유치를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원된 보조금도 회수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고용보조금은 현 법령상 고용노동부에서 취급처리하는 업무로 세종시와 기업 간 MOU를 통한 협약 대상은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세종시가 투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62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했다. 준공 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MOU 협약서나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MOU 후 3개월 내'라는 조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따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KOTRA 등에도 읍소했지만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민 사장은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앞선 데 뒤흔 격으로 2018년 5월 칭다오에 있던 공장이 생산중지명령을 받으면서 반제품 공급이 끊겼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폐업이 속출한 가운데 민 사장의 중국 공장도 타깃이 됐다고 한다. 은행에서 빌린 28억원의 원금 상환을 6개월 앞둔 때였다. 그는 다른 대출처를 찾아 헤맸다. 국내 사업 이력이 거의 없는 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주겠다는 금융회사는 없었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민 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며 진 빚은 52억원에 달한다.

"유턴하면 파격지원 약속했던 지자체 황당한 조건 내밀며 보조금 지급 안해"

민덕현 거성컴프레사 사장이 국내 복귀를 결심한 건 2013년 한국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군산, 전주, 원주, 세종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희망한다며 앞다퉈 그를 만났다. 그는 "한국에 들어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생산하면 중국산에 비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유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회했다고 한다. 까다로운 지원 조건이 발목을 잡아서다. 그는 당초 공장 한 동을 먼저 짓고 사업이 안정되면 나중에 한 동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투자계획서에 명시된 공장 두 동을 모두 지어야 약속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도해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6. 8.(월)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담당과장	김진섭(044-300-4610)	담당자	사무관 윤여승(044-300-4651)

한국경제 「中서 유턴한 어느 中企 사장의 탄식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 보도 관련 해명

2020년 6월 6일(토) 한국경제(1면)는 「中서 유턴한 어느 中企 사장의 탄식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임.

- (보도)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 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 이로부터 5년 뒤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민 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는 보도와 관련

⇒ (해명) ① 고용보조금에 관한 사항

- 고용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직원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센터에서 신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 우리시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약속된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없음

⇒ (해명) ②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는 사항

-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고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산업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조금(15억 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원('15.10~'17.6)하였으며,
- 다만, 해당 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간 당초 상시고용인원 40명을 유지하여야 하나, '19년 1월 기준 9명에 불과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고용미달에 해당하는 보조금(12억9천만원)을 '19년 5월 환수하였음

- **(보도)** 「세종시가 투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 **(해명)** 산업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담보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보도)** 「그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회했다고 한다.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발목을 잡아서다. 그는 당초 공장 한 동을 먼저 짓고 사업이 안정되면 나중에 한 동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투자계획서에 명시된 공장 두 동을 모두 지어야 약속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라는 보도와 관련,
- ⇒ **(해명)** 당초 해당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16. 9월까지 공장 두동 신축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 보조금 수령기업은 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환수 대상임
- **(보도)** 「민 사장은 가동하지 않는 공장 한 동을 다른 업체에 임대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뒤 5년간 임대를 금지하는 조건 탓이었다.」 라는 보도 관련,
- ⇒ **(해명)**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투자사업장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치단체 및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임대 관련사전 요청이 없었음
- **(우리시 입장)** 한국경제신문은 세종시의 지원 부재, 무리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 산업부의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은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보도내용은 해당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사실 관계를 현저히 왜곡한 명백한 오보임
 - 이로 인해 세종시의 이미지 훼손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를 크게 퇴색시킬 수 있어 정확한 보도가 요구됨